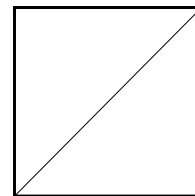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70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3. 4. (제 4 차)

의
결
사
항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3. 4.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주)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6월)’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의 원칙 등),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57조(투자광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제25호의2 및 제29호, [별표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제7호, 제52조(과태료) 제2항 제1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투자광고),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별표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항,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30.) 심의필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020.2.12.) 심의필

<별지>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우리은행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태료 227.7억원** 부과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업무의 일부 정지 6월*)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금융위 의결일(2020.3.4.) 익일부터 6개월간(2020.3.5.~2020.9.4.)

- 조치사유(과태료)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14.2억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0.5억원,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213억원

* 설명의무 위반 5.4억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8억원, 녹취의무 위반 0.8억원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3항 제1호, 제449조 제1항 제21호, 제25조의2,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별표4]

2. 조치사유

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1) 왜곡된 상품 홍보 및 교육에 따른 불완전판매 초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PB/FA* 등 영업점 직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에 대한 사내홍보, 직원연수, 상품상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Financial Advisor의 약자로 우리은행 영업점 내 VIP전용창구 팀장을 의미하며, 2019.9월말 기준으로 698명임(참고로, 2019.9월말 PB는 52명임)

- 해당 상품이 원금 100% 손실 가능한 ‘매우높은위험’ 등급(1등급)의 상품임에도 다음과 같이 영업점 직원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였음

- ①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상품(요약)제안서 등에 포함된 수익률 모의 실험결과*와 관련하여 방법론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채 상품판매에 유리한 결과만을 강조하여

*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독일금리연계, 미국금리스프레드연계 대부분)

- 영업점 직원들이 마치 해당상품의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인하고 해당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 ② 2019.1분기·2분기 핵심 추진상품으로 해외금리연계 DLF를 선정하여 ◇◇◇◇◇◇부를 통해 영업점 직원에게 ‘선진국 금리 기초자산으로 안정+수익성 겸비*’한 상품으로 안내하였음

* 검사과정에서 실제로 영업점에서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으로 광고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었음

- △△△△부 마케팅담당자는 △△△△부장의 지시 등에 의해 판매실적 우수 영업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기상환확률이 높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펀드 판매우수사례’ 자료를 작성한 후 영업점에 전파하였음

- ③ 판매직원 연수 시 상품의 위험보다는 과거 금리추이나 긍정적인 전망을 근거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교육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2019.3.13. △△△△부 상품담당자가 ♣♣자산운용 이사에게 영업본부 연수를 요청하면서 기초자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설명* 하도록 요청하였음

* “우리은행에서 내고 있는 이런 구조화 상품들이 사실 이렇게 좀 이슈화되고 있는 자산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손실이 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넘 부정적인 뷰를 말씀하시면 불안해하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심어드리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상품담당자를 비롯한 △△△△부 직원들이 평소 영업점 직원과의 메시지를 통해 원금손실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안내하였음

* “독일 10년 채권이 올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밑으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행사가격 $\Delta 0.2\%$ 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등

- △△△△부가 상기 사례와 같이 상품안내자료, 직원연수, 메시지 상담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안내·교육한 결과

- 영업점 직원들이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오인한 상태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구체적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례*가 영업점 직원 면담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 “안내장 등에 표현된 대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으며, 전액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안내는 부족했습니다.” 등

- 368건의 적합성보고서*가 “안정성 고려**” 등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교부되었음

* 금융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신규투자자 또는 고령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경우 투자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체결 전 교부하고 투자자로부터 확인받는 서류임

** 투자권유 사유 : (안정성 고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원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고 자동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습니다.

(2) 영업점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 우리은행은 2019.1.15. ~ 6.21. 기간중 122개 영업점에서 해외금리연계 DLF 427건*(880억원 및 미화 539만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번 검사대상계좌는 총 2,006건이며, 이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계좌는 21.3%(427개 계좌)에 해당하며, 내규상 준수 의무 위반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위반비율은 64.9%(1,302건)에 달함

※ 2019.8.8.~11.19. 기간 중 손실확정된 독일국채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계좌 642개 (1,25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45.2%(손실금액 567억원)이며,

- 영국금리연계 DLF의 경우 2020.2.3. 기준으로 판매계좌 1,140개(2,757억원)의 예상 평균손실률은 △29.3%(손실금액 807억원)임

(가)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106개 영업점에서는 2019.1.15. ~ 6.21. 기간 중 348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379건(가입금액 801억원 및 미화 441만불)을 판매하면서
 -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상향하였으며(371건, 가입금액 790억원 및 미화 441만불)
 -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12건, 가입금액 19억원)

(나)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19.1.29. ~ 5.31. 기간 중 19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19건(가입금액 24.6억원 및 미화 97.7만불)을 판매하면서
 -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공격투자형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 위험' 등급의 펀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 등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다)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9.2.20. ~ 5.23. 기간 중 9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9건(가입금액 11.4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우리은행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9.1.22. ~ 6.18. 기간 중 21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21건(가입금액 27.5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라)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9.2.27. ~ 6.21.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 등 6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전산조작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등록직원의 지문을 본인의 단말기에 인식시켜 직접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25명의 투자자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26건(46억 6,156만원)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음

(마)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우리은행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1.29. ~ 3.6. 기간 중 2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2건(가입금액 2억 8천만원)을 판매하면서 잡음만 들리는 등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녹취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경영진은 ▲▲그룹의 목표설정계약서(KPI), 펀드신규가이드* 등을 통해 펀드 M/S 1위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금리연계 DLF 등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일반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한 반면,

* ▲▲그룹에서 영업점 KPI와 별도로 영업본부·영업점별로 부여한 공모·사모펀드 판매목표로서 일별로 ▲▲그룹, 영업본부장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음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상품출시의 적정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금리연계 DLF를 선정·판매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불완전판매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9.8.8.~11.19. 기간 중 손실확정된 독일국채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계좌 642개 (1,25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45.2%(손실금액 567억원)이며,

- 영국금리연계 DLF의 경우 2020.2.3. 기준으로 판매계좌 1,140개(2,757억원)의 예상 평균손실률은 △29.3%(손실금액 807억원)임

(1) 사모펀드 출시·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가) 경영진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 추진·독려

- 우리은행 ●●● 은행장은 2018년도부터 ▲▲그룹의 사업계획 및 목표설정계약서(KPI)에서 펀드 M/S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였음

- ▲▲그룹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도 사모펀드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집중을 추진한 결과 펀드잔액 기준 외형성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 하였으며,

* 타행은 2017년 대비 펀드잔액이 축소 또는 소폭상승(△1조 288억원~6,150억원)될 동안 우리은행은 1조 7,161억원 증가하여 펀드시장 점유율 1위에 근접

- 2019년에도 현장중심 상품 출시를 통한 사모펀드 판매 확대(전년대비 2조원(18.4%) 증대)를 통해 2019년 펀드 최초 M/S 1위 도약(목표 점유율 : 27.8%)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PB고객 15,000명 신규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을 강조하였음

- 2019년 상반기 ▲▲그룹 성과기술서에서 시장석권 및 비이자 증대 부문 주요추진사항으로 '적시적 시장대응 상품판매를 통한 사모시장 선도'를 적시하고 해외금리연계DLF, 환토ELF, 대체투자펀드 출시·판매를 강조하였으며

- 추진 결과로서 2019.6월 기준 전체펀드 잔액 1위(21조 2,755억원) 도약 및 2019년 상반기 펀드비이자 수익 551억원을 달성(전년 동기대비 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타행은 전년동기대비 △252억원 ~ 15억원 증가에 그침

- ●●● 은행장은 확대영업본부장 회의(매월), 영업추진전략회의(반기) 등을 통해 ▲▲그룹의 사업목표 및 관리 실적 등 펀드 영업추진 내용을 보고받았음

-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서는 자산관리상품 판매 관련 배점은 높게 부여하고 고객수익률 및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였으며, 자산관리상품(펀드·신탁) 판매에 대해 별도의 배점을 부여하였음

* 2019년 상반기 KPI기준 배점

- 일반영업점 : 비이자이익(10.0%), 자산관리상품 판매(3.5%) > 고객수익률(2.0%), 소비자보호(△2.0%)
- PB센터(☎☎☎☎☎☎☎☎센터) : 비이자이익(20.0%), 자산관리상품 판매(9.0%) > 고객수익률(2.0%), 소비자보호 배점은 없음
- 고객수익률 항목에서 사모펀드는 제외하였음

- ☆☆☆ 부행장보(▲▲그룹장)는 영업점 KPI와 별개로 PB/FA 성과평가기준(KPI)과 영업본부·영업점별 펀드판매목표(펀드신규가이드)를 설정하여 펀드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실적을 관리하였음

- 2019.5월초부터 펀드신규가이드에서 DLF 등 고수익 상품을 따로 구분하여 목표 달성률을 매일 영업본부장, ▲▲그룹 내 직원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으며
- 영업본부·영업점별 실적뿐만 아니라 상품권유 직원별 실적도 취합하여 관리하면서, 영업점 포상, PB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였음
- ☆☆☆ 부행장보는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장이 주관하는 확대영업본부장 회의 등 여러 회의석상에서 해외금리연계 DLF처럼 만기가 짧고, 선취수수료가 높은 사모펀드 집중판매를 독려*하였음
 - * “금리연계DLF상품에 대해 기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상반기에만 2모작 가능하고, 선취수수료도 120bp로 비이자 효자상품이니, 적극적으로 판매 부탁”(2019.1월 영업추진 전략회의), “저희가 밀고 있는 고수익 사모펀드는 고객들이 원하는 만기가 짧고, 영업점에서 원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신규수수료는 80에서 200bp이고 연간 회전율을 감안하면 최대 400bp까지 나옵니다”(2019.5월 확대영업본부장 회의) 등
- 2019.4.30. ~ 5.23. 기간 중 ☆☆☆ 부행장보가 영업본부 단위로 10차례 방문하여 해외금리연계 DLF상품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이모작·다모작’상품으로 강조하면서 PB/FA직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검사기간 중 영업점 직원과의 면담에서 확인되었음

(나) 사모펀드 출시·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①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 출시과정에서 상품선정 위원회·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등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 2017.8.17.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360개 중 357개 (99.2%)가 상품선정위원회나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를 생략한 채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 기 출시한 상품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장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를 지속하였음
- 특히, 2019.5월경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의 경우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의 손실배수 (333배)를 높여가며 신규상품을 출시한 결과, '원금 100% 손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② 사모펀드 판매 이후 기초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의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앞서 2019.5월경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팀이 상품의 손실배수(333배)를 높여가며 상품을 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팀 차원에서의 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해외금리연계 DLF 등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우리은행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모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는 절차나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

투자자가 조기에 손실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환매 등 투자자의 선제적인 대응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9.4.9. ◆◆◆◆팀 소속 위험관리담당자가 ‘사모펀드 관리 프로세스 강화’ 방안으로 ⁱ⁾반기별 1회 이상의 고객 대상 운용보고서 안내, ⁱⁱ⁾판매사 선관의무 차원에서 독립적인 관점의 Review(투자자산 현황, 수익률 점검) 강화, ⁱⁱⁱ⁾시스템을 활용한 사모펀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그룹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관련지침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③ 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상품선정 과정상 문제점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선정위원들에게조차 상품선정결과 및 관련 주요의견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야 할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상품선정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2017.10.12. 영국금리연계 DLF, 2018.12.28. 칸토 ELF, 2019.3.11.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등

- 상품선정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위원 선정 및 교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일금리연계 DLF에 대한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 소속위원이 상품출시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상품출시담당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 직원으로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여 ‘찬성’ 의견의 평가표를 징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품선정 업무절차상 내부통제사항이 미비된 채 금번 검사 실시 전까지 ▲▲그룹장,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음

④ 초고령자나 신규거래자 등에 대해 상품 권유시 적합한 상품임을 확인 받기 위한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하여,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해외금리연계 DLF 등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에 대해 ‘안정성 고려’ 등 실제 상품의 특성과 맞지 않는 권유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368건(적합성보고서 징구대상 1,025건 중 35.9%)* 발견되었음

* (예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원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고 자동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습니다.”

(2)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준법감시인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펀드상품 안내 및 연수 등 사모펀드 상품출시와 관련하여

▲▲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그룹에서 다수의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우리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본부 부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도 및 위험도 판단 기준 및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7년 ~ 2019년중 ▲▲그룹이 펀드 M/S 1위 달성을 위해 사모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증대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출시 전 법률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여부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만 한 차례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내부통제가 완비되었더라면 출시되지 않았어야 할 상품(2017.10.12. 영국 금리연계 DLF, 2018.12.28. 칸토 ELF, 2019.3.11.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등)이 평가표 임의작성, 부결권 무력화, 평가위원 임의교체 등으로 인해 출시되었으며, 2019.5월 출시된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원금손실 100%) 상품출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본부 부서의 자점감사 항목 선정을 해당 부서에 위임하였으나 불합리한 항목 선정에 대해 시정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부의 자점감사 항목에 상품출시 절차, 상품안내 및 직원연수에 대한 점검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사모펀드의 위험 등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 담긴 상품안내장을 작성·배포하고, 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ㄹㄹㄹ 등 56명은 2018.9.3. ~ 2019.4.26. 기간 중 1,547명의 고객에게 125회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4,022건을 발송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ㄹㄹㄹ 등 65명은 2018.9.3. ~ 2019.3.22. 기간 동안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16,332명에게 180회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8,499건을 발송하였음

○ 상기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을 누락한 광고행위 4,022건 중 일부는 아래의 법규 위반 행위에도 해당됨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ㄴㄴㄴ 등 55명은 2018.9.3. ~ 2019.4.26. 기간 동안 1,533명의 고객에게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4,008건을 발송하면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ㄴㄴㄴ 등 14명은 2018.9.12. ~ 2019.3.14. 기간 중 592명의 고객에게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599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백테스트 결과 3개월 수익상환 달성률 100%”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 및 수익률에 대해 확정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 사실이 있음

※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를 포함한 전체 문자발송 32,521건 중 원금 손실 가능성이 누락된 표현은 32,418건(17,671명),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23,635건(10,728명)

※ 고객정보 마케팅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한 광고행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 우리은행 ♥♥♥♥♥지점 부지점장 ㄴㄴㄴ 등 44명은 2018.9.3. ~ 2019.3.14. 기간 중 4,225명의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6,68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투자광고) ③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것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 (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46.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파악·서명 등을 통한 확인, 유지·관리 또는 확인 내용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파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의 고지·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7. 제47조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0. 제57조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3조(설명 의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0조(투자광고) 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 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버. 법 제57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5,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다.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③~⑥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쿠. 법 제40조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2,40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3.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의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월○ 과태료 부과(227.7억원)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정직(3월) 3명○ 감봉(3월) 1명○ 견책 1명○ 주의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판매

(1) 왜곡된 상품 홍보 및 교육에 따른 불완전판매 초래

-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영업점 직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에 대한 사내홍보, 직원연수, 상품상담 등을 통해

- 해당 상품이 원금 100% 손실 가능한 매우높은위험 등급(1등급)의 상품임에도 영업점 직원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등 중요사항에 대해 왜곡된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음

①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한 상품(요약)제안서 등에 포함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와 관련하여 동 결과가 손실발생가능성이 축소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상품판매에 유리한 결과만을 강조한 제안서, 상품출시안내자료, 직원연수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여

*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영업점 직원들이 마치 해당상품의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인하고 해당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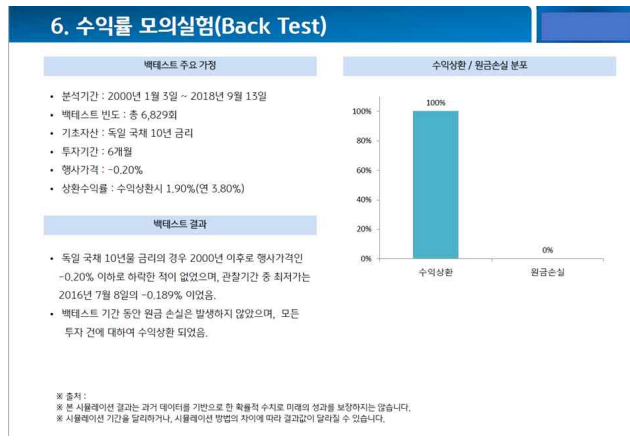
- 예를 들어,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상품제안서 상 기초자산 6개월 변동폭 분포자료에 의하면 행사가격(-0.20%)을 하락할 확률이 35% 이상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이 존재하며 최대 0.90%까지 하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동 변동폭 분포자료는 고객에게 교부되는 상품(요약)제안서 일부에서 누락되었고, 안내·연수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연수 등을 통해 영업점 직원에게 설명되지 아니하였음

【 상품제안서 상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및 6개월 변동폭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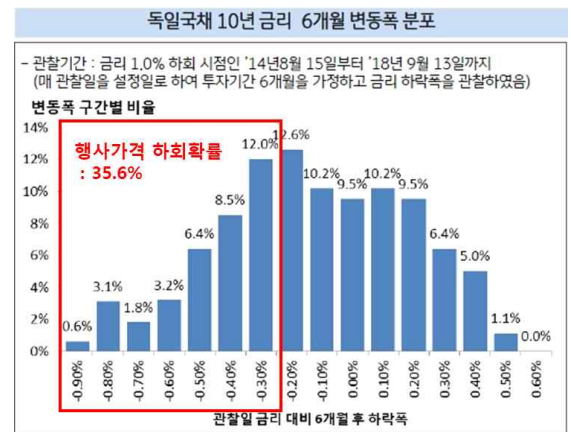
1.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판매에 유리한 자료)

→ 상품 안내 및 직원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2. 6개월 변동폭 분포(판매에 불리한 자료)

→ 일부 제안서 및 직원 안내·연수자료 미반영



* 상품제안서 상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는 백테스트 기간 동안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투자 건에 대하여 수익상환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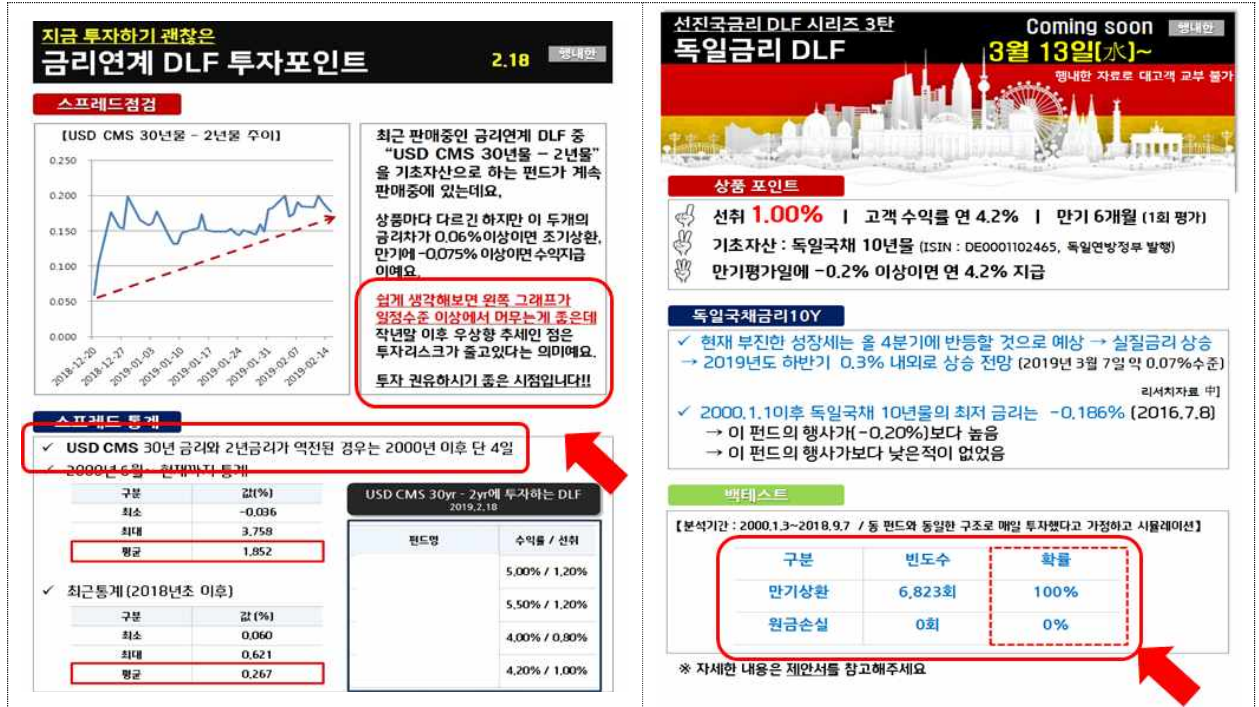
* 독일국제 금리가 1.0%를 하회한 시점 이후부터 산정한 결과 6개월 뒤(만기 시) 금리가 행사가격(-0.20%)을 하회할 확률이 약 **35.6%**임

- 상품제안서 상 수익률 모의실험이 과거 독일금리가 1.0~5.0% 수준일 때도 행사가격을 -0.20%로 가정하여 손실발생가능성이 축소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또는 수정 없이 연수 및 마케팅에 그대로 활용하였음

* 통상적인 공모ELS의 수익률 모의실험의 경우 행사가격을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대비 비율로 설정하여 상품출시시점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에 투자한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반면, 본 건의 경우 행사가격의 절대값($\Delta 0.20 \sim \Delta 0.33\%$)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금리수준이 높을 때의 손실발생가능성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 없이 “만기 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의 긍정적인 상품출시 안내자료를 사내게시판에 등재하거나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영업점 직원에게 전송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음

【 수익률 모의실험결과를 활용한 마케팅자료 사례 】



- ② 2019.1분기·2분기 핵심 추진상품으로 해외금리연계 DLF를 선정하여
 ◇◇◇◇◇부를 통해 영업점 직원에게 ‘선진국 금리 기초자산
 으로 안정+수익성 겸비*’한 상품이며, 10억원 유치시 비이자수익
 1,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검사과정에서 실제로 영업점에서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으로 광고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었음

【 2019.2분기 핵심 추진상품 안내자료 】

2019년 2분기 핵심 추진상품				
과 목	Target 고객	핵심추진 상품	특징 / 장점	영업점 손익
[1] 펀드	· TC고객/ 주요법인	대체투자사모펀드 (ex. 라임펀드)	·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 성과기대	⇨ 10억 유치시 수익&비이자 연16백 (6개월 0.8% * 2회)
		금리연계DLF	· 선진국 금리 기초자산으로 안정+수익성 겸비 · 3개월 조기상환 및 이자지급 가능	⇨ 10억 유치시 수익&비이자 10백 (1.0%)
	· 정기예금 / MMF 보유 고객		· 낮은변동성 + 주식 페어 트레이딩 통한 알파수익 · 안전자산(USD) 보유하면서 예금 +α 수익	⇨ 10억 유치시 수익&비이자 연5백 (0.5%)
	· 일반고객		· 고금리채권투자로 중수익 기대 · 다양한 글로벌 채권 투자로 예금 +α 수익	⇨ 10억 유치시 수익&비이자 연13백 (1.3%)

- △△△△부 마케팅담당자는 △△△△부장의 지시 등에 의해 판매실적 우수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기상환확률이 높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펀드 판매우수사례’ 자료를 작성한 후 영업점에 전파하였음

* “작년부터 금리연계 DLF 다모작을 진행중이에요.”, “빠른 조기상환기회가 있는 DLF상품 집중판매” 등

- ③ 판매직원 연수 시에서도 상품의 위험보다는 과거 금리추이나 긍정적인 전망을 근거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교육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직원연수사례 】

구 분	일 자	제 목	내 용
화상연수	2019.1.25.	DLF교육-금리,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행사가격 -0.12%는 CMS 30Y-2Y가 가본 적이 없는 구간이므로 굉장히 안전 ○ 고객분들도 다시 설명할 필요없이 재권유하기에도 좋은 상품 ○ 3,6개월에 조기상환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1년째에는 반드시 손실이 안나고 수익으로 상환될 상품
영업본부연수	2019.3.14. ~3.21.	A영업본부, B영업본부, C영업본부 글로벌 시황 및 전략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10년 채권이 올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화상연수	2019.3.15.	DLF점검 및 독일금리연계 신상품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 ○ 마이너스 밑으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행사가격 -0.2%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영업본부연수 (♣자산운용)	2019.3.21.	D영업본부 미국 영국 독일 금리 시황 및 전망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너스 금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 장기보다 높은 단기 금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화상연수	2019.6.14.	금리상품시황 및 하반기 ELS신상품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히려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있어, 미국CMS는 수익상황이 전혀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 2019.3.13. △△△△부 상품담당자가 ♣♣자산운용 이사에게 영업본부 연수를 요청하면서 기초자산에 대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설명*하도록 요청하였음
 - * “우리은행에서 내고 있는 이런 구조화 상품들이 사실 이렇게 좀 이슈화되고 있는 자산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손실이 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넘 부정적인 뷰를 말씀하시면 불안해하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심어드리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상품담당자를 비롯한 △△△△부 직원들이 평소 영업점 직원과의 메신저를 통해 원금손실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안내하였음
 - * “독일 10년 채권이 올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밑으로 가더라도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행사가격 $\Delta 0.2\%$ 로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독일국채 그것도 10년짜리가 딱 한번 6개월 뒤 $\Delta 0.2\%$ 이하로 안 빠지면 수익률 주는 상품이에요” 등
- △△△△부가 상품안내자료, 직원연수, 메신저 상담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안내·교육한 결과
 - 영업점 직원들이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오인한 상태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구체적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례*가 영업점 직원 면담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 * “안내장 등에 표현된 데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으며, 전액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안내는 부족했습니다.” 등
 - 368건의 적합성보고서*가 “안정성 고려**” 등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교부되었음
 - * 금융회사가 파생결합증권을 신규투자자 또는 고령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는 경우 투자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체결 전 교부하고 투자자로부터 확인받는 서류임
 - ** 투자권유 사유 : (안정성 고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원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고 자동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습니다.

(2) 영업점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 우리은행은 2019.1.15. ~ 6.21. 기간 중 122개 영업점에서 398명의 투자자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427건*(880억원 및 미화 539만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번 검사대상계좌 2,006건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계좌는 21.3%(427개 계좌)이며, 내규상 준수의무 위반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위반 비율은 64.9%(1,302건)에 달함

※ 2019.8.8.~11.19. 기간 중 손실확정된 독일국채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계좌 642개(1,25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45.2%(손실금액 567억원)이며,

- 영국금리연계 DLF의 경우 2020.2.3. 기준으로 판매계좌 1,140개(2,757억원)의 예상 평균손실률은 △29.3%(손실금액 807억원)임

(가) 적합성 원칙 등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금융센터 등 106개 영업점에서는

2019.1.15. ~ 6.21. 기간 중 348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379건(가입금액 801억원 및 미화 441만불)을 판매하면서

-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상향하였으며(371건, 가입금액 790억원 및 미화 441만불)

-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12건, 가입금액 19억원)

(나)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19.1.29. ~ 5.31. 기간 중 19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DLF 19건(가입금액 24.6억원 및 미화 97.7만불)을 판매하면서

-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공격투자형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펀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 등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다)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8개 영업점에서는

2019.2.20. ~ 5.23. 기간 중 9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9건(가입금액 11.4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우리은행 ●●●●●지점 등 21개 영업점에서는

2019.1.22. ~ 6.18. 기간중 21명의 투자자들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21건(가입금액 27.5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라)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등 6개 영업점에서는

2019.2.27. ~ 6.21.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6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전산조작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등록직원의 지문을 본인의 단말기에 인식시켜 직접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25명의 투자자에게 해외금리연계 DLF 26건(46억 6,156만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마)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리은행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1.29. ~ 3.6. 기간 중 2명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연계 DLF 2건(가입금액 2억 8천만원)을 판매하면서 잡음만 들리는 등 녹취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녹취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1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68조
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경영진은 ▲▲그룹의 목표설정계약서(KPI), 펀드신규 가이드* 등을 통해 펀드 M/S 1위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금리연계 DLF 등의 고위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일반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한 반면,

* ▲▲그룹에서 영업점 KPI와 별도로 영업본부·영업점별로 부여한 공모·사모펀드 판매목표로서 일별로 ▲▲그룹, 영업본부장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독려에 활용되었음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상품출시의 적정성 및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금리연계 DLF를 선정·판매함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 2019.8.8.~11.19. 기간 중 손실확정된 독일국채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계좌 642개(1,255억원)의 평균 손실률은 △45.2%(손실금액 567억원)이며,
 - 영국금리연계 DLF의 경우 2020.2.3. 기준으로 판매계좌 1,140개(2,757억원)의 예상 평균손실률은 △29.3%(손실금액 807억원)임

(1) 사모펀드 출시 · 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가) 경영진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 추진 · 독려

□ 우리은행 ●●● 은행장은 2018년도부터 ▲▲그룹의 사업계획 및 목표설정계약서(KPI)에서 펀드 M/S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였음

- ▲▲그룹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도 사모펀드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집중을 추진한 결과 펀드잔액 기준 외형성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성*하였으며,

* 타행은 2017년 대비 펀드잔액이 축소 또는 소폭상승(△1조 288억원~6,150억원)될 동안 우리은행은 1조 7,161억원 증가하여 펀드시장 점유율 1위에 근접

- 2019년에도 현장중심 상품 출시를 통한 사모펀드 판매 확대 (전년대비 2조원(18.4%) 증대)를 통해 2019년 펀드 최초 M/S 1위 도약 (목표 점유율 : 27.8%)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PB고객 15,000명 신규유치를 추진하는 등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을 강조하였음

- 2019년 상반기 ▲▲그룹 성과기술서에서 시장석권 및 비이자 증대 부문 주요추진사항으로 '적시적 시장대응 상품판매를 통한 사모시장 선도'를 적시하고 해외금리연계DLF, 환토ELF, 대체투자펀드 출시·판매를 강조하였으며

- 추진 결과로서 2019.6월 기준 전체펀드 잔액 1위(21조 2,755억원) 도약 및 2019년 상반기 펀드비이자 수익 551억원을 달성(전년 동기대비 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타행은 전년동기대비 △252억원 ~ 15억원 증가에 그침

- ●●● 은행장은 확대영업본부장 회의(매월), 영업추진전략회의(반기) 등을 통해 ▲▲그룹의 사업목표 및 관리 실적 등 펀드 영업추진 내용을 보고 받았음

-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서는 자산관리상품 판매 관련 배점은 높게 부여하고 고객수익률 및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였으며, 자산관리상품(펀드·신탁) 판매에 대해 별도의 배점을 부여하였음

* 2019년 상반기 KPI기준 배점

- 일반영업점 : 비이자이익(10.0%), 자산관리상품 판매(3.5%) > 고객수익률(2.0%), 소비자보호(△2.0%)
- PB센터 : 비이자이익(20.0%), 자산관리상품 판매(9.0%) > 고객수익률(2.0%), 소비자보호 배점은 없음
- 고객수익률 항목에서 사모펀드는 제외하였음

- ☆☆☆ 부행장보(▲▲그룹장)는 영업점 KPI와 별개로 PB/FA 성과평가기준(KPI)과 영업본부·영업점별 펀드판매목표(펀드신규가이드)를 설정하여 펀드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실적을 관리하였음

- 2019.5월초부터 펀드신규가이드에서 DLF 등 고수익 상품을 따로 구분하여 목표 달성률을 매일 영업본부장, ▲▲그룹 내 직원 등에게 송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음

- 영업본부·영업점별 실적뿐만 아니라 상품권유 직원별 실적도 취합하여 관리하면서, 영업점 포상, PB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였음

【 펀드신규가이드 사례 】

2019 上 주요(高수익)상품 실적 현황_영업본부																
2019년 6월 14일																
* 추가입금 : 19년 상반기 신규계좌에 한함													표준진도율 91.2%			
[단위 : 억원]																
그룹	순위	코드	본부명	본부장	PB지정자	2019년 상반기 주요상품(신규+추가입금)							당일	당월		
						해외 채권형	주식형	高수익 채권형	ELF	DLF	대체투자	합계			신규금액대비 신규금액	비율
C-1	1					335.8	37.6	63.8	196.4	432.6	535.0	1,601.2	4,034.0	39.7%	43.8	86.8
	2					31.7	21.3	24.5	173.8	525.3	315.4	1,092.0	3,027.5	36.1%	12.4	22.6
	3					316.7	46.1	110.2	209.4	510.2	957.5	2,150.0	6,408.3	33.6%	58.3	180.7
	4					62.8	40.2	47.9	406.2	490.0	514.8	1,562.0	5,154.2	30.3%	72.0	153.9
	5					137.5	35.1	63.2	84.8	441.4	868.1	1,630.1	5,835.9	27.9%	18.3	83.5

- ☆☆☆ 부행장보는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중 은행장이 주관하는 확대영업본부장 회의 등 여러 회의석상에서 해외금리연계 DLF처럼 만기가 짧고, 선취수수료가 높은 사모펀드 집중 판매를 독려하였음

【 ☆☆☆ 부행장보의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판매 주요 독려내역 】

순번	시기	회의명	발언내용 요약(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언급부분)	비고
1	2018.9월	확대영업 본부장 회의 ¹⁾	금리연계형은 최근 고객수익률이 연 5~6%에 달하고, 영업점수수료도 1%가 넘습니다. 4분기 집중적인 영업을 부탁드립니다	해외금리연계 DLF 집중 영업 당부
2	2018.10월	영업본부장 간담회 ²⁾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수익, 저리스크 상품으로 미국금리연계형 상품 소개	미국스프레드금리연계 DLF를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으로 소개
3	2018.11월	영업본부장 간담회	실적상위 영업본부를 살펴보면, 미금리연계 등 사모펀드를 집중판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사모펀드 영업을 확대 당부	미국금리연계 DLF 성과 안내& 사모펀드 영업 확대 당부
4	2019.1월	영업추진 전략회의 ³⁾	금리연계DLF상품에 대해 기존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상반기에만 2모작 가능하고, 선취수수료도 120bp로 비이자효자상품이니, 적극적으로 판매 부탁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라인업 확대 및 상품 적극 판매 부탁
5	2019.2월	영업본부장 간담회	금리연계 DLF상품 라인업 확대 & 3~4개월 내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선취수수료도 120bp로 비이자효자 상품이니, PB고객 및 주요법인 타겟으로 적극적인 판매 부탁	

【 ☆☆☆ 부행장보의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판매 주요 독려내역 】

순번	시기	회의명	발언내용 요약(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언급부분)	비고
6	2019.3월	확대영업 본부장 회의	사모펀드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 3,4개월짜리로 짧게 가시고, 기초자산도 금리, 무역금융 등 주가와 무관한 상품 많이 출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영업을 당부	기간이 짧고 기초 자산도 금리 등 주가와 무관한 사모펀드 상품 영업 당부
7	2019.3월	영업본부장 간담회	사모펀드 수수료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조기 상환도 3,4개월로 짧아졌으며, 주식과 무관한 상품도 계속 출시하고 있으므로 1억 이상 자금은 꼭 사모펀드로 유치를 당부	만기 짧고 수수료가 높은 사모펀드 유치 당부
8	2019.5월	확대영업 본부장 회의	저희가 밀고 있는 고수익 사모펀드 는 고객들이 원하는 만기가 짧고 , 영업점에서 원하는 높은 수수료율 로 신규수수료는 80에서 200bp이고 연간 회전율을 감안하면 최대 400bp까지 나옵니다	독일금리 하락기인 '19.5월에도 고수익 사모펀드 유치를 강조
9	2019.5월	영업본부장 간담회	1억 이상 거래자금은 고수익 사모펀드 로 유치를 당부드립니다	
10	2019.7월	PB지점장 전진대회	사모펀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서 짧은 만기, 높은 수수료, 다양한 기초 자산 을 필두로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런칭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출시할 예정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중단('19.6월) 이후에도 계속 고수익 사모펀드 판매를 당부
11	2019.7월	영업추진 전략회의	고수익 사모펀드를 집중 판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은행장 주관, 임원 및 영업본부장급 이상 참석하였음(1달 1번 개최, 1·7월은 제외)
- 2) 영업부문 임원 및 서울, 경기 영업본부장 참석하였음(1달 1번 개최)
- 3) 은행장, 임원, 영업본부장 + 지점장급, 해외점포장 포함(반기별(1·7월) 개최)

- 2019.4.30.~5.23. 기간 중 ☆☆☆ 부행장보가 영업본부 단위로 10차례 방문하여 해외금리연계 DLF상품을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이모작·다모작'상품으로 강조하면서 PB/FA직원들에게 직접 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검사기간 중 영업점 직원과의 면담에서 확인되었음

(나) 사모펀드 출시·판매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①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 출시과정에서 상품 선정위원회·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등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 2017.8.17. 이후 신규 출시한 해외금리연계 DLF 360개 중 357개 (99.2%)가 상품선정위원회나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이하 '공평협'이라 함)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를 생략한 채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 기 출시한 상품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장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를 지속하였음
 - 특히, 2019.5월경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의 경우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의 손실배수(333배)를 높여가며 신규상품을 출시한 결과, '원금 100% 손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 독일국채금리연계 상품 손실상황 대응 】

-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베리어를 $\Delta 0.20\% \rightarrow \Delta 0.32\%$ 로 낮추고 만기는 2개월 단축하였으며 손실배수는 200배 \rightarrow 333배로 증대하였으며,
-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2019.5월 중 664억원*(53.2%) 판매하였음

* 펀드설정일 기준

설정일	2019.3.21.(최초)	2019.5.8.(중간)	2019.5.31.(최종)
기초자산가격	0.035%	$\Delta 0.057\%$	$\Delta 0.209\%$
베리어	$\Delta 0.20\%$	$\Delta 0.25\%$	$\Delta 0.32\%$
만기	6개월	6개월	4개월
손실배수	200배	250배	333배

② 사모펀드 판매 이후 기초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전산 시스템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앞서 2019.5월경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팀이 상품의 손실배수(333배)를 높여가며 상품을 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팀 차원에서의 위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해외금리연계 DLF 등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우리은행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모 파생결합 증권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는 절차나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

투자자가 조기에 손실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환매 등 투자자의 선제적인 대응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9.4.9. ▲▲그룹 위험관리담당자가 ‘사모펀드 관리 프로세스 강화’ 방안으로 ⁱ⁾반기별 1회 이상의 고객 대상 운용보고서 안내, ⁱⁱ⁾판매사 선관의무 차원에서 독립적인 관점의 Review(투자자산 현황, 수익률 점검) 강화, ⁱⁱⁱ⁾시스템을 활용한 사모펀드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그룹장에게 보고하였으나, 관련지침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③ 상품선정위원회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선정·교체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상품선정 과정상 문제점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상품선정위원들에게조차 상품선정결과 및 관련 주요의견에 대해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야 할 상품을 출시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상품선정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상품선정위원회 부결사유에 해당하나 출시된 상품 사례 】

상품	위원회 일자·방법	통지절차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영국CMS금리연계 DLF	2017.10.12. (서면)	○ ♠♠♠♠♠부 소속위원 불참(출석인원 미달)에도 임의로 출석·찬성의견 으로 처리
관토ELF	2018.12.28. (서면)	○ ♥♥♥♥♥♥♥♥센터 소속위원의 부결권 행사 에도 상품출시 강행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2019.3.11. (서면)	○ ♠♠♠♠♠부 소속위원 불참(출석인원 미달)에도 임의로 출석·찬성의견 으로 처리

- 상품선정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위원 선정 및 교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일금리연계 DLF에 대한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 소속위원이 상품출시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상품출시담당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 직원으로 위원을 임의로 교체하여 ‘찬성’ 의견의 평가표를 징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품선정 업무절차상 내부통제사항이 미비된 채 금번 검사 실시 전 까지 ▲▲그룹장,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음

- ④ **초고령자나 신규거래자 등에 대해 상품 권유시 적합한 상품임을 확인받기 위한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하여,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해외금리연계 DLF 등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에 대해 ‘안정성 고려’ 등 실제 상품의 특성과 맞지 않는 권유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한 사례가 368건(적합성보고서 징구대상 1,025건 중 35.9%)* 발견되었음

* (예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를 원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과거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기초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자동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습니다.”

(2)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준법감시인**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펀드상품 안내 및 연수 등 사모펀드 상품출시와 관련하여

▲▲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그룹에서 다수의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우리은행 내부통제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본부 부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도 및 위험도 판단 기준 및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2017년 ~ 2019년 중 ▲▲그룹이 펀드 MS 1위 달성을 위해 사모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증대를 고려하지 않고 상품출시 전 법률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만 한 차례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내부통제가 완비되었더라면 출시되지 않았어야 할 상품(2017.10.12. 영국 금리연계 DLF, 2018.12.28. 관토 ELF, 2019.3.11. 독일국채금리연계 DLF 등)이 평가표 임의작성, 부결권 무력화, 평가위원 임의교체 등으로 인해 출시되었으며, 2019.5월 출시된 독일국채금리연계 DLF(원금손실 100%) 상품출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본부 부서의 자점감사 항목 선정을 해당 부서에 위임하였으나 불합리한 항목 선정에 대해 시정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부의 자점감사 항목에 상품출시 절차, 상품안내 및 직원연수에 대한 점검항목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에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사모펀드의 위험 등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 담긴 상품안내장을 작성·배포하고, 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계법규 >

1. 「지배구조법」 제24조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별표2>, <별표3>

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ㄴㄴㄴ 부지점장 등 56명은

2018.9.3. ~ 2019.4.26. 기간 중 1,547명의 고객에게 125회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4,022건을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 하였으며,

- 우리은행 ♥♥♥♥♥지점 ㄴㄴㄴ 부지점장 등 65명은

2018.9.3. ~ 2019.3.22. 기간 동안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16,332명에게 180회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8,499건을 발송하였음

- 상기 준법감시인 사전확인을 누락한 광고행위 4,022건 중 일부는 아래의 법규 위반 행위에도 해당됨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 ㉸㉸㉸ 부지점장 등 55명은 2018.9.3. ~ 2019.4.26. 기간 동안 1,533명의 고객에게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4,008건을 발송하면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법」 제57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은행 ♥♥♥♥♥지점 ㉸㉸㉸ 부지점장 등 14명은 2018.9.12. ~ 2019.3.14. 기간 중 592명의 고객에게 해외금리연계 DLF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2,599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 “백테스트 결과 3개월 수익상환 달성률 100%”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 및 수익률에 대해 확정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 사실이 있음

※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를 포함한 전체 문자발송 32,521건 중 원금손실 가능성이 누락된 표현은 32,418건(17,671명),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23,635건(10,728명)

※ 고객정보 마케팅활용 미동의 고객에 대한 광고행위(「신용정보법」 §40 7.)

- 우리은행 ♥♥♥♥♥지점 ㉸㉸㉸ 부지점장 등 44명은 2018.9.3. ~ 2019.3.14. 기간 중 4,225명의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6,684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57조, 제249조의5
2.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271조의6
4.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자산운용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76 02-2100-2663	02-3145-7062